

국립과학수사연구원**① 마약 남용자 및 남용 마약류 모니터링 및 노출여부 감정**

- 수사기관에서 의뢰된 소변, 혈액, 모발 등에서 마약류 및 그 대사체 분석으로 남용 예방 및 단속 실효성 확보
- 국내 마약 남용 트렌드 및 현황 파악으로 대책 근거 마련
- 마약 노출여부 감정을 통한 단속, 수사 및 재판 지원

② 임시 마약류 및 유사체지정제도 규정된 마약류 모니터링

- 수사기관에서 의뢰된 남용 의심 물질에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임시마약류 및 그 유사체 검출
- 유사체지정제도에서 규정하는 의심 물질 검출 시 유관기관에 통보
- 기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신종 남용 우려 물질 검출 시 유관기관에 통보, 마약류 지정 등 검토 요청

③ 보고관찰 대상자 모니터링

-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33조에 따라 본드, 부탄가스, 마약류 등 남용으로 인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노출 여부 모니터링으로 보호관찰 업무 실효성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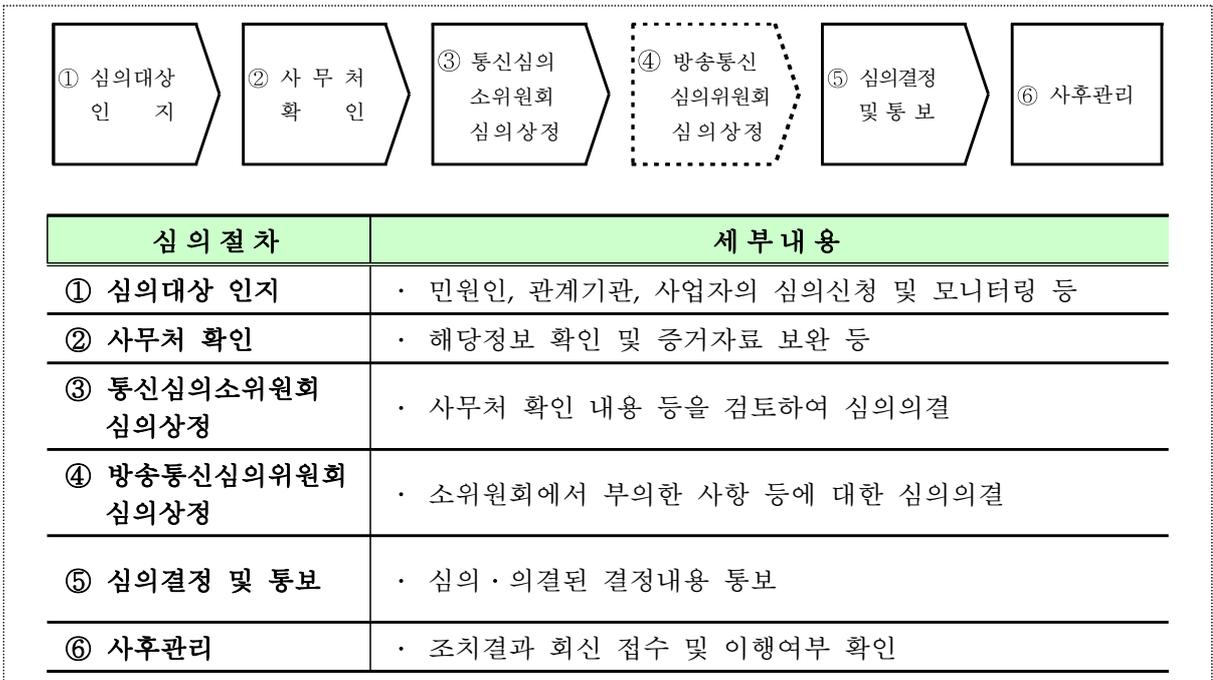
④ 마약류 및 그 대사체에 대한 분석법 및 감정기법개발

- 마약류, 임시마약류에서 규정하는 물질의 분석법 개발
- 소변, 혈액, 모발 등의 생체시료에서 마약류, 임시마약류 및 그 대사체들에 대한 분석법 및 감정기법 개발로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남용 예방 및 단속 실효성 확보

방송통신위원회

1 통신심의제도(방송통신심의위원회)

- (개요) 마약류 매매 등 실정법 위반 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
 - * 시정요구 결정 유형 : 해당 정보의 삭제, 이용해지, 접속차단 등
- (관련규정)
 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
 - 「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」 제7조제4호
 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 등
- (심의절차)



국가정보원

① 마약 연관 국제범죄 국내 침투 및 확산 저지

- 국내외 정보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국제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·분석하여 국제범죄의 국내 침투 및 확산 차단

* 국제범죄란 ?

국내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, 2개 이상의 복수 국가가 범죄행위자·피해자 또는 범죄행위 발생지역에 연계되어 나타나는 범죄를 의미

-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

② 대국민 마약범죄 신고 및 피해 예방 홍보

- 홈페이지 등 활용, 국제범죄 관련 신고·상담 및 국제범죄 연루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우리국민 마약범죄 예방·차단
 - * 전화(111번)와 홈페이지(111 신고하기) 및 모바일 홈페이지 신고서비스 제공
 - 마약범죄 실태 및 해외마약운반 피해사례와 대처방법 등을 소개하는 등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
-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제범죄 관련 정보자료를 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대국민 정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중

대검찰청

- (개요) 검찰은 마약류 밀수 등 공급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며, 국내 마약류 제조행위 근절과 공·항만을 통한 마약류 밀수행위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,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·재활 활성화 및 마약류 오·남용에 관한 예방 및 홍보활동 등 다각도로 실시하는 국가마약퇴치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.
- (주요내용) 검찰은 마약류범죄 척결을 위해 ① 마약류 밀수 등 공급 강력 차단 ② 마약류 수요 철저 감축 ③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를 지속 추진
 - 마약류 밀수 등 해외 유입 마약류 사전 차단
 - 마약류 밀수입 사전 차단을 위해 유입국과 실시간 국제공조체제 유지하며, 밀수 등 공급 사범 적발 시 강력하고 지속적인 법 집행
 - 대규모 마약류 공급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보고, 범죄수의 환수를 통해 조직의 운영 자금 원천 차단
 - 마약류 수요 감축 및 치료·재활 활성화
 - 마약류투약자에 대한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보호조건부, 교육이수조건부,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
 -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명령, 치료감호 적극 청구
 - 마약류 밀수·판매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 제도 운영
 - 국제적 정보교환·공조수사 등 협력체제 강화
 -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(ADLOMICO)¹⁾,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(APICC)²⁾, 마약퇴치지원사업³⁾ 등 통해 국제공조체제 강화·발전시켜 국제마약범죄조직 척결에 기여

1)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(ADLOMICO): Anti-Drug Liaison Officials'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, '89년 대검찰청이 마약 범죄에 국제적으로 공동 대처하기 위해 신설하여 매년 개최, 미·중·일, 아·태 및 유럽·아프리카 등 지역 20여 개국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, 인터폴, 세계관세기구 등 5개 국제기구 마약관계관 180여 명이 참석, UN이 '모범적 회의체'라고 평가

2) APICC(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): Asia-Pacific Information &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,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창설,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간 정보교환 및 강제송환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국제협력체

3) 마약퇴치지원사업: 대검찰청이 '07년부터 아세안·중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지원사업, 국내 초청연수, 수사장비 지원, 마약퇴치캠페인 현지 개최 등을 통한 마약단속기관 역량 강화 목적, KOICA 협력 국내초청연수,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 시행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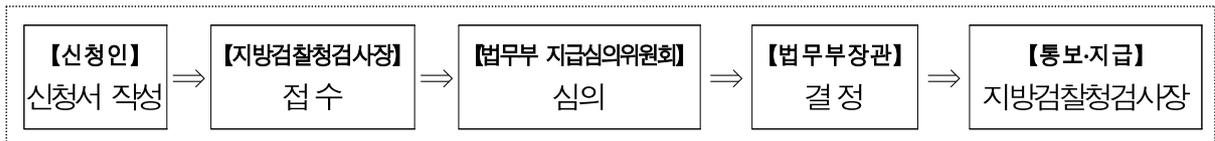
-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(1961) 등 마약관련 국제협약, 결의안 등 철저히 준수하고, 유엔마약 범죄사무소(UNODC)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마약류 퇴치 활동 및 국제공조에 적극 동참

1 마약류 신고보상금 제도

- (개요) 마약류 범죄 신고, 고발 또는 검거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제보자 등에게 공정하게 지급하는 제도(제보자의 신고의식 고취)
- (관련규정) 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」 제54조, 「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(법무부령)」

- *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(보상금) ...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- *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1조(목적) ...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·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보상금의 지급원칙) 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당해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.

- (지급 절차)



관세청

① 마약류 밀수단속

- (개요)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마약류 밀수단속 및 공항·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·대마사범 수사
- (관련규정)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② 마약류 밀수신고

- (개요) 무역거래와 관련한 관세 등 세액탈루와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(마약류 밀수 포함)에 대한 신고
- (신고대상)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,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
- (포상금) 최대 1억5천만원 지급
- (신고방법)
 - 전화신고: 국번없이 125번(이리로) 제보(밀수신고 10)
 - 인터넷 신고: 관세청 및 전국세관 홈페이지>국민참여>신고마당>밀수신고>신고하기
 - 모바일 신고: 모바일 관세청 APP>전체메뉴>밀수신고>신고서 작성
 - 방문·팩스·우편 신고: 인천·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

경찰청

① 마약류 수사체계 고도화

○ (개요) 경찰청 - 시·도경찰청 - 경찰서 내 전 마약 수사부서의 정원을 확보하고 수사역량을 높임으로써 마약류 수사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함

○ (주요내용)

- * 경찰청: 마약범죄수사계(係)⇒ 과(課)로 확대 개편, 종합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
- * 시·도청: 다크웹 전담팀, 의료용 마약류 전담팀 등 운영, 직접수사 역량 제고
- * 경찰서: 주요 거점 지역 경찰서 내 마약류 전담 수사관 증원

② 마약류 범죄 수사역량 강화

○ (개요) 경찰 수사관이 마약류 범죄 수사 시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역량을 강화, 마약류 범죄 책임 수사기관으로써의 역할 정립

○ (주요내용)

- * 마약탐지장비, 방탄·방검복, 마스크, 장갑 등 구매, 수사팀 배치
- * 사이버 마약수사 전문가 경력경쟁채용
- * 국내외 마약류 동향 및 검거사례를 정리한 동향지 일선 배포, 공유

③ 마약류 범죄 수사 국내외 공조

- (개요) 국내외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거나 마약류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함
- (주요내용)

- * 국내공조: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대검찰청·해경·관세청 등 국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,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공조 활동
- * 국제공조: UN 마약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주요국 담당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, 국외 경찰 주재관 및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해외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고 강제소환하는 등 공조 활동

④ 마약류 단속 강화 및 범죄예방 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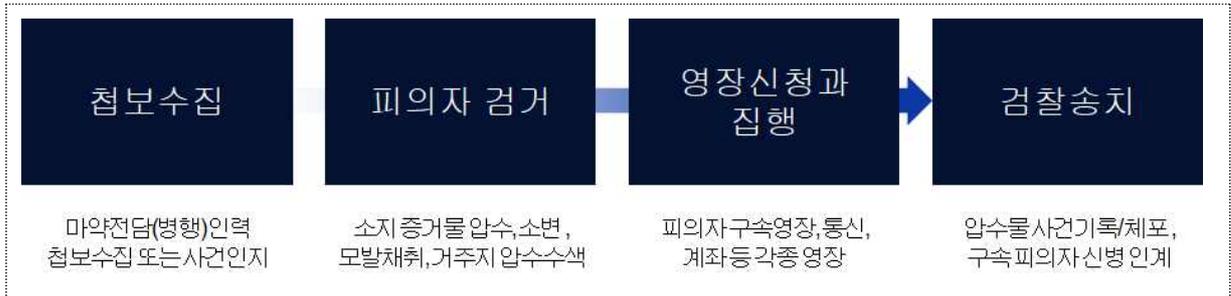
- (개요)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, 주요 검거 사례를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 및 제재 가능성을 알림으로써 범죄예방 활동 전개
- (주요내용)

- *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특별단속('20.10.23.~12.31.),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(3~5월), 양귀비·대마 밀경행위 특별단속(4~7월)
- * 주요 검거사례 언론 보도, 카드뉴스·모션그래픽 제작, 유튜브 폴라이브 방송 출연 등 시청각 콘텐츠를 통해 범죄예방 활동

해양경찰청

1 해양 마약류 사범 단속

- (개요) 마약으로부터 깨끗한 대한민국,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에서 마약사범 단속 전담
- (관련규정) 「해양경찰청 마약수사규칙(제1조~12조)」, 첩보수집 및 정보원·피의자압수물 관리, 압수물 감정의뢰 등 마약 수사 전반 규정
- (주요임무) 해양 마약범죄 첩보 수집부터 집중 단속 등
 - 마약범죄 단속대책 수립 및 국내·외 유관기관 간 공조 등
 - 해양에서 마약류 밀반입 및 제3국으로 이동 차단과 함께 도서지역 등에서 마약제조·유통 등 해양 마약범죄 강력 단속



< 주요 단속 사례 >



3천억 대 코카인 실린 화물선 태안 해상서 적발

코카인 101kg, 태안 화물선 적발(19.8월)
- 시가 3천억원 상당, 330만명 투약 가능



코카인 35kg, 부산항 화물선 적발(21.2월)
- 시가 1천억원 상당, 100만명 투약 가능